

## ‘6.15 공동 선언’ 9주년과 남북 관계 전망

정 영 철 /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은 탈냉전 이후, 남북 관계 발전을 규정한 원칙과 실천의 강령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직접 서명이 담긴 두 선언은 통일의 대강(大綱)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부정은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지도자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6.15 공동 선언’ 이후, 지난 9년 동안 남과 북은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었고, ‘대결과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평화의 패러다임’으로의 변화하였다. 그러나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양 선언을 둘러싼 해석과 이행을 강제할 만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한 점, 그리고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 미, 일의 갈등과 틈새가 발생하면서 이를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노정할 점 등은 한계로 남아있다.

현재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에서의 강경한 의장 성명, 그리고 이에 반발한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에서의 제재, 지금 논란의 한 복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국제 사회의 대응 등으로 ‘악순환의 덫’에 걸려 있다. 이 ‘악순환의 덫’을 제거하지 못하면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6.15 공동 선언’에 의해 형성된 남북간의 모든 협력 사업의 좌절을 의미한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최근 북한의 행동 패턴이 ‘경고와 실행’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건에서 ‘PSI 참여 - 군사적 대응 - 보복 대응’이 자칫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이다.

과거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대처해서 많은 경우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보낸 후에야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갖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또 다루어야 할 의제가 너무나 큰 상황이다. 또한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보냈을 경우 자칫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의 복원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묘수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출발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지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15 공동 선언’이 지니고 있는 ‘대결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화해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6.15 공동 선언’ 9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공영, 평화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묘수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냉전으로 회귀한 남북 관계

남북 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4월 북한 로켓(인공위성) 발사와 5월의 핵실험, 그리고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등이 이어지면서 남북 관계는 '잃어버린 10년'을 넘어 '56년 전'의 적대적 충돌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다. '6.15 공동 선언'으로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던 남북 관계가 불과 1년 6개월 만에 다시금 냉전의 관계로 후퇴한 것이다. 이의 원인은 지난 10여년의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가 결국에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로 나아가지 못하면서, 불안정한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구조가 그대로 온전하게 남아있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으로는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을 둘러싸고 남북한의 현격한 입장 차이가 지금의 상황을 만들어낸 밑바탕을 이루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북한은 줄기차게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즉각적인 이행을 요구하며 남한을 압박하였고,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비난의 수위를 높여왔다. 이명박 정부의 양 선언에 대한 무시 혹은 애매모호한 태도와 기본합의서에 대한 강조, 그리고 상호주의에 입각한 새로운 남북 관계의 추구로부터 경색은 이미 시작되었고, 이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 4월부터 본격적으로 대남 비난을 강화해왔다. 급기야는 작년 7월의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남북 화해와 협력의 상징인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고, 이어 12월에는 개성공단에 대한 엄격한 통행 제한마저 실시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에만 하더라도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도 불구하고, 반전의 계기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북한의 강경한 대미, 대남 정책이 이어지고 국제사회의 제재와 고립, 강경 정책이 충돌하면서 남북 관계 역시 회복하기 힘든 '구조의 덩어리'에 갇히고 말았다.

현재의 남북 관계는 '말 대 말'의 공방을 넘어 '행동 대 행동'의 대결로 접어들었다. 이미 북한은 로켓 발사 실험, 핵실험 등으로 자신들의 강경한 입장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으며, 우리 정부 역시 유엔에서의 제재 주도와 PSI 전면 참여 등의 행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행동 대 행동'의 공방이 자칫하면 군사분계선에서 무력 충돌의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데에 있다. 이미 북한은

우리 정부의 PSI 참여를 놓고 ‘선전포고’로 간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으며, 나아가 군사적 대응을 공개적으로 경고하였다. 이에 우리 정부 역시 북한의 도발에 ‘군사적 응징’을 다짐하고 있다. 이제 남북 관계는 화해와 협력의 관계에서 후퇴하여 냉전의 무력 대결의 시대로 다시금 회귀하게 된 셈이다.

### 6.15 공동 선언에 대한 북한의 입장

현재의 남북 관계 경색 및 충돌의 근원에는 ‘6.15 공동 선언’이 자리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남북기본합의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애매모호한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것과 달리, 북한은 ‘6.15 공동 선언’을 통일의 최고 이정표로, 나아가 ‘6.15 시대’의 출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이처럼 ‘6.15 공동 선언’에 애착을 보이고 있을까? 일각에서 말하듯이, 다른 여타의 합의서와 달리 최고지도자가 직접 사인한 합의서이기 때문일까? 물론, 이도 일정하게 맞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6.15 공동 선언’에 대한 역사적 의의는 물론 내용적 의의보다는 형식적 측면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것에 불과하다. 북한의 ‘6.15 공동 선언’ 그리고 나아가 ‘10.4 선언’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두 선언이 만들어지기까지의 역사적 과정에 대한 구조적 평가에 기초해야 한다. 사실, ‘6.15 공동 선언’은 냉전의 대결 정책에서 벗어나 화해와 협력의 포용 정책을 추진하면서 낳은 결과물이다. 즉, 김대중 정부 시절의 햇볕 정책(대북 포용 정책)으로 상징되는 화해·협력 정책은 냉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각에서 대북 정책을 설계, 이행하였고 그 결과물로서 ‘6.15 공동 선언’을 일궈낼 수 있었다. 따라서 ‘6.15 공동 선언’은 과거의 모든 남북간 합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것이며, 특히는 남북의 두 정상이 직접 만나서 서명한 문서로서의 권위와 실천력을 담고 있다. 그리고 이 선언으로 인하여 남북 관계는 과거와는 달리 ‘적대에서 화해로, 전쟁에서 평화로, 경쟁에서 협력으로’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내었으며, 2007년의 ‘10.4 선언’은 이러한 패러다임 하에서 통일, 평화, 경제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합의한 남북 공동의 실천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결국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은 탈냉전 이후, 남북 관계 발전을 규정한 원칙과 실천의 강령이며, 과거의 모든 합의들과는 궤를 달리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모든 남북 합의들과 달리 남북의 두 정상이나 직접 서명한 것이라는 것도 두 선언이 가지는 ‘권위’와 ‘역사적 무게’의 성격을 그 이전의 것과 구분 짓고 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북한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을 금과옥조처럼 여기며, 이의 존중과 실천을 가장 우선시하고 있다. 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상 최고지도자의 의지와 직접 서명이 담긴 두 선언은 통일의 대강(大綱)과 같은 것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의 이정표로서 ‘6.15 공동 선언’이 위치하고 있다면, 그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으로서 ‘10.4 선언’이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부정은 북한의 입장에서 최고지도자와의 합의를 부정하는 것 일뿐만 아니라, 화해와 협력의 남북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며, 나아가 남북 관계를 남과 북의 단합 즉, 민족적 단합이 아닌 대결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또한,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은 탈냉전 이후, 국제적인 고립과 경제적 위기에 처한 북한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즉, 남북 경협을 통한 경제적 이득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의 마련, 그리고 북한의 국제적 고립으로부터의 탈출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주었고, 실제로 양 선언 이후 북한은 세계의 주요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확대하는 등의 부수적인 이익을 획득하기도 하였다. 2000년 이후, 북한은 유럽연합 및 유럽의 13개국과 외교 관계를 맺었고, 이외에도 캐나다, 필리핀, 호주 등의 주요 국가들과 외교 관계 수립 및 복원의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이러한 외교 관계의 확대보다 더 큰 중요성은 북핵 문제 등 현안에 있어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북한에게 더없이 좋은 ‘기회의 창’을 만들었다는 점이다. 즉, 남북의 화해와 협력이 진전되면서 북핵 문제에서도 미국을 비롯한 일본 등의 대북 강경책을 약화시키고,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에 북한의 여지가 넓어지게 된 것이다. 특히, 부시 행정부 시절 미국의 대북 강경 정책에도

불구하고 남북한의 협력 관계가 지속됨으로써 이를 무력화할 수 있었으며, ‘9.19 공동 성명’을 채택하는 등 평화적인 해결책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러한 ‘6.15 공동 선언’ 이후의 남북 관계가 커다란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보았을 때 북한의 입장에서 ‘6.15 공동 선언’과 이의 실천 내용으로서 ‘10.4 선언’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두 선언의 부정 혹은 무시는 결국 북한의 입장에서 ‘6.15 이전 시대’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며, 그것은 곧 냉전 시대로의 회귀임에 다름 아닌 것이다. 또한 양 선언이 부정 혹은 무시되고 있는 조건에서, 양 선언에 의해 만들어진 수많은 하위 합의들(개성공단 등)은 지켜지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고, 실제 북한은 지난 1월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 발표를 통해 남북간의 모든 군사적, 정치적 합의를 무효화한다고 발표하였다. 북한으로서는 지금까지 남북 관계를 규정해왔던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이 지켜지지 않는 조건에서 더 이상의 남북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다. 결국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는 한 남북간의 수많은 합의와 협력 사업들은 지속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남북간의 신뢰 관계가 형성되기 어렵게 되었다.

### 6.15 공동 선언 9주년 : 성과와 한계

‘6.15 공동 선언’은 이제 9주년을 맞이하였다. 그리고 지난 9년 동안 남북은 인적, 물적 교류를 중심으로 한 수많은 협력 사업을 벌여왔다. 이에 따라 사람과 물자가 휴전선을 관통하여 남북을 오고가게 되었고, 분단 이후 처음으로 남북의 철도가 개통되기도 하는 등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의 마련과 통일에의 기대감을 한층 부풀려놓았다. 남한 주민들의 대북 인식이 변화하였고, 북한 주민들의 대남 인식 역시 변화하였다. 그 결과 2006년 남북한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동요를 일으키지 않고 순탄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는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국민들의 안보 불감증에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북의 화해와 협력의 진전이 한반도 평화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 희망을 높여준 것에 원인이 있다

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평화에 대한 희망이 '6.15 공동 선언'이 가져온 최고의 성과인 것이다.

지난 9년 동안의 성과는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었고, 무엇보다도 남북 관계를 규정해왔던 패러다임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즉, 대결과 전쟁의 패러다임에서 협력과 평화의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인 것이다. 이에 따라 남북한은 연인원 10만 명 이상의 왕래, 18억 달러에 달하는 교역(2008년 기준)은 물론 일상적 경제 협력과 공동의 사업 추진, 그리고 올림픽 등에서의 공동 입장을 통해 국제적으로는 평화의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었다. 내부적으로도 각 주민들의 상대방에 대한 인식 변화, 일상적인 접촉을 통한 상호 변화는 물론 상호 신뢰의 증진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넘을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우선,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남북간 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다. 사실, '6.15 공동 선언'으로 마련된 남북의 경제 협력과 사회 문화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문제의 해결 없이는 한 단계 더 나아가 발전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따라서 2007년 합의한 '10.4 선언'에서 천명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상호 노력은 한반도를 둘러싼 본질적 문제에 접근한 것이자 경제 및 사회 문화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도 요청되는 사안이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4 선언'은 제대로 실행되지도 못하고 좌초하고 말았다.

다음으로, 양 선언이 최고지도자간에 합의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둘러싼 해석과 이행을 강제할 만한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함으로써 선언의 이행이 남북한의 정치적 선택에 의해 좌우되었다는 점이다. 지난 정권 말기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동의와 제도화의 문제가 논의되었지만, 정치적 입장 차이에 의해 제대로 갖춰지지 못했다. 또한, 남북한의 해석상의 차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겪기도 하였다. 특히, 남남갈등이 격화되면서 양 선언이 전체 국민의 동의와 지지를 얻는데서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많은 부분은 정

치적 정쟁의 대상이 되었다. 이러한 점은 남북한 합의서의 이행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과제를 안겨주고 있는 지점이라 할 수 있다. 사실, ‘10.4 선언’은 남북의 이러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규정하고 있다. 제2항에서 합의된 내정불간섭과 법적, 제도적 장치의 마련, 그리고 의회 회담은 남북 합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이행할 수 있는 실질적 내용이었지만, 실현되지 못하고 말았다.

다음으로, 지난 9년 동안의 남북 관계는 그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로서는 주변국과의 불협화음을 일정 정도 감수하였고, 때로는 한미, 한일 관계의 불편함을 인내해야 하였다. 이는 곧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한, 미, 일의 갈등과 틈새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는 우리의 대북 정책을 실행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을 노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미국의 대북 경제 봉쇄와 강경 정책으로 인해 우리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실행되기 어려운 국면을 맞이하기도 하였다. 대표적으로 개성공단 사업과 남북 철도 연결의 경우 미국과의 조율 및 양해, 혹은 유엔사와의 문제 해결을 거치면서 어려움을 극복해왔다.

정리하자면, ‘6.15 공동 선언’을 계기로 남북은 대결과 전쟁의 한반도를 화해와 협력의 한반도로 탈바꿈시켰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분야에서의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정치·군사적 문제의 미해결, 이행의 제도적 장치의 미비, 남남 갈등과 국제적 갈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혀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가장 큰 한계는 ‘불가역적 남북 관계’를 구축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에 있을 것이다. 이는 ‘6.15 공동 선언’과 이어지는 ‘10.4 선언’에서 천명한 정치, 군사, 안보 분야의 문제 해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결국은 좌절하고 말았던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는 앞으로의 남북 관계 발전에 가장 큰 과제를 던져주고 있는 부분이라 하겠다.

### ‘6.15 공동 선언’의 좌절과 남북 관계 전망

현재 남북 관계는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이행이 좌절되고, 선언 이전의 상태로 회귀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말했듯이, 냉전의 대결 상태로의 회귀

인 것이다. ‘행동 대 행동’의 적대적 관계가 구축되면서 남북이 모두 군사적 선택마저도 주저하지 않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이루어 온 화해와 협력의 성과를 논의하기 어렵게 되었다.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퇴장하고, 오마바 행정부의 등장으로 북미 관계의 개선을 기대했던 초기의 예측은 빗나갔으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강경 정책이 겹치면서 남북 관계, 북미 관계, 북일 관계 등이 모두 어려운 지경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기에 최근의 북핵 실험으로 인해 북중 관계와 북러 관계도 후퇴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원인의 하나는 분명 내부 문제(후계 문제)와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로 규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조급하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북한에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대북 정책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미국 문제가 놓여있으며, 집권 초기부터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해 불분명한 입장을 보여준 현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도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미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미국을 상대로 한 일종의 ‘통미봉남’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6.15 공동 선언’과 그 이행 방안과 내용이 담긴 ‘10.4 선언’은 더 이상 실행될 가능성이 없어졌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양 선언의 이행을 둘러싼 논점을 벗어나 있다. 즉, 양 선언의 이행을 둘러싼 논의를 벗어나 지금의 정치·군사적 대결 상황을 평화적으로 관리하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의 방도를 찾아내는 것으로 모아진다. 이미 한반도의 상황은 북한의 로켓 발사와 유엔에서의 강경한 의장 성명, 그리고 이에 반발한 북한의 핵실험과 유엔에서의 제재, 지금 논란의 한 북판으로 접어들고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국제 사회의 대응 등으로 ‘악순환의 덫’에 걸려있다. 이 ‘악순환의 덫’을 제거하지 못하면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은 더 이상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곧 ‘6.15 공동 선언’에 의해 형성된 남북간의 모든 협력 사업의 좌절을 의미한다. 이미 금강산관광, 개성관광이 중단되었고 개성공단 사업 역시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남북 관계의 대결 상태로의 전환은 그동안 인적, 물적 교류를 주도해왔던 인도적 지원 사업과 협력 사업



마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북간의 대화 채널이 완전히 단절되어 있고, 적대적 대응이 상승 효과를 부추기고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남북 관계의 복원은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서해 해상에서 경쟁적으로 펼쳐지고 있는 위협과 응징의 악순환은 지금의 남북 관계가 더욱 더 악화될 수도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특히, 북한의 핵실험과 우리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선언을 계기로 군사적 대응을 예고한 북한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최근 북한의 행동 패턴이 ‘경고와 실행’을 전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조건에서 ‘PSI 참여 - 군사적 대응 - 보복 대응’이 자칫 더 큰 군사적 충돌을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인 것이다. 과거 두 차례에 걸친 서해교전이 양측의 정책 결정 당국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또 그럴 의지가 있었던 조건에서 벌어진 국지전이였다면, 지금의 충돌은 정책 결정 당국에 의해 쉽게 통제되거나 비공식 채널을 통한 사태의 예방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는 지금의 남북 관계가 더 악화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당분간 남북 관계의 개선은 기대하기 힘들고, 최소한의 관리조차도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남북 관계의 발전을 위한 과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해’를 목표로 자신들의 일정표에 따라 내부적으로는 경제건설에 주민들을 독려, 동원하고 있고(이미 150일 전투 : 5월 10일 ~ 10월 10일 시작), 한편으로는 안정적인 후계 체제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의 이러한 목표는 결국 북미 관계의 정상화와 남북 관계의 안정적 관리라는 대외적 여건의 개선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북한의 처지에서 보자면, 지금의 남북 관계, 북미 관계의 대결적 갈등은 결코 유리한 것이 되지 못한다. 북한 역시 지금의 상황이 결코 지속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2012년까지 자신들의 주장하는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내부적 안정과 외부의 경제적 지원이 요구되기 때문이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과 남

북 관계의 발전이 없다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지금의 위기를 분석한다면, 북한은 미국과 새로운 판을 만들어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북핵문제 해결의 틀로서 6자회담을 벗어나 한반도 평화체제, 핵과 미사일, 북미 관계 정상화 등의 한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의제를 놓고 미국과 직접 담판을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최근 총련 ‘조선신보’의 보도에서도 ‘전혀 새로운 접근’을 미국에 촉구하고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 관계에서 지금 당장의 현안도 중요하지만,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즉, 북한의 처지와 의도를 제대로 읽고, 이에 맞추어 대북 정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의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대북 정책의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기다림의 전략’이나 상호주의에 입각한 ‘비핵 개방 3000’ 혹은 ‘상생과 포용의 정책’은 별다른 효과가 없다. 그것은 이미 북한이 이들 정책에 대한 적대적 태도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벌어질 북미 관계의 변화에도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반도 문제의 새로운 판짜기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의 틀을 고집하는 것은 결국 뒤처짐을 결과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현재의 상황에서 지금 당장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제한적이다. 더욱이 유엔에서의 제재 등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 조건에서 남북 관계의 개선을 기대하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PSI 전면 참여와 군사적 대응의 충돌에서 확인되었듯이, 유엔 등에서의 제재 등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는 것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더구나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이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면서 남북간의 신뢰는 이미 소진되었고, 불신과 적대감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 누구의 표현처럼 지금의 상황에서 우리는 ‘잃어도 적게 잃는’ 방향에서 문제를 처리해야 할 것이다.

남북간의 대립이 양 선언에 대한 남북간의 대립에 기인한 측면이 있는 상황에서 문제의 해결은 결국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기본 정신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한반도 위기 고조 행위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겠지만, 이를 위해서도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우선되어야 한다. 양 선언의 무조건적 이행이 아니라, 선언의 정신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협상을 진행해서 현실에 맞게 수정, 보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악순환의 덫’에서 우선 빠져나오는 것이 선결되어야 한다. 과거 남북 관계가 경색되었을 때, 이를 타개했던 유일한 방도는 바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신뢰의 증진이었다. 이는 김대중 정부 초기 시절, 노무현 정부 시절의 대량 탈북 및 북핵 실험으로 인한 경색 국면의 시기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이때에도 경색 국면의 타개는 포용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끊임없는 대화의 시도였다. 지금도 이러한 접근은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다. 지금 이명박 정부도 북한과의 대화를 원한다고 하지만, 실제 북한에 대화와 협상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있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주장과 달리, 대화와 협상에 대한 의구심과 진정성을 보여주지 못한다. 이래서는 문제의 해결은 커녕 오히려 불신만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 남북 관계는 경색 국면에 대처해서 많은 경우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보낸 후에야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갖기에는 너무나 멀리 와버렸고, 또 다루어야 할 의제가 너무나 큰 상황이다. 또한 시간을 두고 냉각기를 보냈을 경우 자칫 이명박 정부 하에서 남북 관계의 복원은 요원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지금은 문제 해결을 위한 묘수가 보이지 않는다. 묘수가 있다면 그것은 진정성을 갖고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출발은 ‘6.15 공동 선언’과 ‘10.4 선언’의 정신을 존중하고, 그 지점에서 대화와 협상을 추진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이 요구하는 것은 ‘6.15 공동 선언’이 지니고 있는 ‘대결과 경쟁의 패러다임’을 넘어선 ‘화해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의 복귀라고 할 수 있다. ‘6.15 공동 선언’ 9주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 공영, 평화의 남북 관계를 만들어내기 위한 묘수는 바로 여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統**